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뉴스레터



리더칼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 정종오

이슈진단

전문건설업의 일자리 창출효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SOC 투자

연구원소식

“전문건설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한국-베트남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세미나” 개최

발간물안내

“건설업종별 고용창출효과 비교 분석” 발간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합리적 공사비 산정방안 연구” 발간



RICON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공동도급제 확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 정종오

상생과 공존의 건설계약제도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2010년부터 확산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선진적인 계약제도로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발주자와 계약하고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원도급형 발주제도”로 서울과 부산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100% 실시하고 있지만, 유독 전남지역에서는 정착되지 않고 있다. 전남 도내 최근 3년간 건설공사 발주현황을 보면 종합공사 대비 전문공사 발주 건수는 38%, 발주금액은 9%에 불과하다. 관행적인 발주처의 후진성을 타파하고 중소건설업체의 일거리를 찾는 주계약자공동도급 확산은 발주처의 탁상행정에 의지하지 않고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전문건설인의 의지와 전략적인 발상인 필요하다.

이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산을 위해 정책결정권자가 아닌, 건설소비자·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설소비자 갑질 운동을 제안한다. 최근 언론을 뜨겁게 달군 갑질의 형태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필자가 주장하는 갑질은 이러한 부당한 갑질이 아닌, 건설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갑질이다.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은 갑이면서도 갑질은 커녕,

‘을’로 살고 있다. 특히 건설 소비자, 부동산 소비자들은 절대적으로 그러하다. 아파트를 사면서도 아파트의 원가가 얼마인지, 상가를 분양받으면서도 원가가 얼마인지 조차 알지 못한다. 천원짜리 과자를 사도 모든 성분이 표기되어 있는 데, 적어도 수천만원을 들여 구입하는 부동산(건축물)은 원가가 얼마인지,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입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건설함에도 국민들은 계약(입찰)금액만 알뿐, 적정금액이나 원가는 알지 못한다. 이러한 까끔히 계약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하다. 원도급업체는 내역입찰로 하도급업체는 총액입찰로 이루어지는 계약관행은 원도급업체의 이익이 선 보장되고 하도급업체에게는 초저가 공사로 이어지게 된다. 문제는 원도급업체의 이익이 선보장되기 때문에 국민 복지혜택이 그만큼 줄어들고, 초저가 하도급 공사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짙다. 이러한 까끔히 계약에는 당연히 비리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이에 공동도급제가 전문건설업체의 이익이 아닌, 국민들의 피해를 막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공동도급제의 빠른 확

산을 위한 길일 것이다. 그동안 전문건설협회에서 정책결정권자들을 대상으로 큰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오랜 도급 관행에 변화를 이끌지 못한 점도 이러한 믿음에 힘을 더한다.

우선적으로 '하도급입찰 결과 공개 의무' 조항을 시, 도 조례에 담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건설 원가는 하도급에서 결정되기에 이 조항을 만든다면 앞에서 언급한 초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와 원도급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안겨주는 세금 낭비를 모두 막을 수 있다.

또한, 이 조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지역 전문건설업체에서 하도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이 조항이 삽입되면 자연스럽게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고, 건설근로자와 장비업자, 건설자재 업자들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지방세수 증대로 이어진다.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이러한 점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특히, 요즘 경제민주주의가 화두지만,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건설업에 만연 되어 있다. 하도급입찰 결과 공개 및 주계약자공동도급 의무화는 건설업 경제민주주의실현에 기폭제가 되리라 확신한다. 또한 중앙회를 비롯하여 16개 시도회가 똘똘 뭉쳐 '주계약자공동도급제 의무화 확산'을 위한 전략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는다. 전문건설인의 단결된 힘이 절실한 이유다.



전문건설업의 일자리 창출효과

박선구 연구위원(parksungu@ricon.re.kr)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본방향은 적정 성장을 유지하면서 노동시장의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건설업은 전통적으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건설일자리는 임시직 이외에도 사무직, 기술직, 기능직 등으로 다양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번에 건설부문 고용현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하고, 건설투자, 건설기성, 부가가치 증가에 따라 고용탄력성과 임금탄력성이 어떠한 추세를 보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탄력성의 계수 값은 설명변수로 건설투자액을 활용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부가가치, 건설기성의 순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건설투자가 증가할 경우 고용창출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건설 업종별 고용탄력성은 전문건설업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건설투자액이 1% 증가했을 때 전문건설업은 1.121%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건설업 0.028%,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 0.884%에 비해 높게 도출되었다.

셋째,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전문건설업만이 고용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전문건설업이 실질적인 건설시공의 주체라는 점에서 예상과 부합하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임금탄력성은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 모두 건설투자, 건설기성, 부가가치 등에 대해 모두 양(+)의 탄력성을 보였다. 건설투자 및 부가가치 증가에 따른 임금개선 효과는 전문건설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설기성은 종합건설업이 높았다. 또한 근로자 세부 직종별 임금개선 효과는 기술직 근로자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사무직 근로자, 기능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건설투자, 기성, 부가가치의 증가가 고용창출과 임금개선 부문에 있어 하도급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큰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설업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문 건설업에 대한 발주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건설업의 역할이 반드시 요구된다. 건설업은 전체 고용의 7% 이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이며, 건설투자 확대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역시 크기 때문이다. 건설분야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건설산업 내 현재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SOC 투자

조재용 선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7월 19일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국가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이드가 되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국민과 국회, 정부, 기업, 단체 등이 국가의 운영 및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고, 국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안정적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대선 공약을 기초로 국민제안, 정책 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가 포함되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를 진행하는데 5년간 178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건설 산업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간접비 지급방식 개선,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등 불공정 해소를 통한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며(32번 과제), 연평균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혼부부(20만호)와 청년(약 30만 실)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47번 과제).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세종시와 혁신도시, 산업단지를 성장시키고(78번 과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등의 쇠퇴지역을 혁신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한다(79번 과제).

많은 건설 관계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제외하고는 100대 과제에 SOC 관련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에 국무총리가 내년 SOC 예산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인터뷰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SOC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다.

SOC 투자는 신규 투자로 한정하여 지금 현재의 SOC가 충분히 갖추어진 상황만을 바라보고 줄일 것이 아니라, 노후화되어가는 SOC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는 과거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대책이 마련되는 경향이 있었다. 아직 노후 SOC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재 상태로 노후화가 지속되고 충분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사고는 멀지 않아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 일본에서는 SOC 신설에만 집중하고 유지보수를 소홀히 한 결과 2012년 고속도로 터널 천장이 붕괴하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의 SOC 자산들이 노후화되어 가는 지금, 선제적으로 적절한 대비를 해야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SOC와 관련하여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고, 관리방안과 기술 개발에도 충분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 ✓ 31번 과제: 교통 통신비 절감으로 국민생활비 경감 (국토부, 미래부)
- ✓ 32번 과제: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 산업 경쟁력 강화(국토부)
- ✓ 34번 과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산업부·미래부·국토부)
- ✓ 46번 과제: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국토부)
- ✓ 47번 과제: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국토부)
- ✓ 78번 과제: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산업부·행자부·국토부)
- ✓ 79번 과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국토부)

“전문건설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전문건설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공모전

공모주제

공정거래, 계약제도, 건설금융, 건설기술 등 전문건설업 관련
핵심 및 중장기적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정책제안

공모일정

접수기간 : 2017년 8월 21일(월) ~ 9월 8일(금), 17:00 까지
결과발표 : 9월 20일(수) 예정
* 연구원 홈페이지 게재 및 시상일정 개별공지

참가대상

회원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전문건설공제조합 임직원
* 개인 및 팀으로 참가 가능

시상내역

구분	인원(명)	상금
최우수상	1	500만원
우수상	1	200만원
장려상	3	100만원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지정서류를 준수하고 제안내용의 기밀, 기밀, 표절 등의 기타 부정행위 방법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원 시 시상금은 환수함
- 공모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자에게 대한 저작권의 소유 및 활용에 대한 모든 권한은 주최측에 있음
- 공모 접수여 상관, 시상일정 및 시상내역 등은 접수 상황과 현성도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심사기준

1차 : 서면심사
* 주제와 내용의 창의성 및 시의적절성, 결과의 실행성 등을 고려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 발표심사

* 서면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발표심사 거쳐 동위원정

* 발표심사 대상자는 추후 피워보연드를 활용하여 발표자료 작성 필요

참가방법

연구원 홈페이지(www.ricon.co.kr)에서 양식(공모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다운로드

이메일 : ricon@ricon.co.kr 접수

우편 : 07071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3층
(신라대빌, 전문건설회관)
(제)대한건설정책연구원 공모접수처

문의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행정실 ☎ 02-3284-2600



우리 연구원은 오는 9월 8일까지 ‘전문건설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본 공모전은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을 통해 전문건설업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전문건설업의 중장기적 발전과 권익확대를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문건설업 발전에 관심 있는 회원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전문건설공제조합 임직원은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 가능하며, 참가 희망자는 공정거래, 계약제도, 건설금융, 건설기술 등 전문건설업 현안해결 및 중장기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공모하면 된다.

공모접수는 8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되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당선자에게는 최우수상 500만원(1명), 우수상 200만원(1명), 장려상 100만원(3명)의 상금이 지급된다.

“한국-베트남 국제 협력 세미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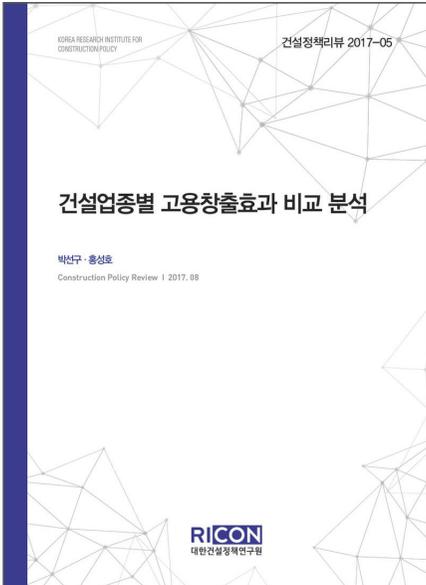
우리 연구원은 오는 9월 7일(목) 오전 10시, 삼성호텔에서 “한국-베트남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

동 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 차관, 신홍균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전재열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을 포함한 정부, 업계 및 학계에서 100여명이 참석하며, 베트남 측에서는 응웬 딩 또한(Nguyen Dinh Toan)건설부 차관, 도우 타 잉 퉁(Đỗ Thanh Tùng) 베트남 국립건축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국제 세미나에서는 베트남 측이 한국 건설기업의 높은 기술력을 소개받기를 요청함에 따라 1주제인 초고층 건설 분야에서는 초고층 빌딩 적용 기술 및 롯데월드타워 사례(롯데건설: 도광수 수석·서유상 수석), 도심지 고층빌딩 건설프로젝트 CM사례(범CM: 김효성 부사장·김성영 상무), 2주제인 친환경 건설 분야에서는 친환경 건설 디자인 사례(삼우: 이건설 상무·김창영 부소장), 3주제인 스마트건설 분야에서는 건설장비 자동제어 시스템을 활용한 스마트건설(영신디엔씨: 최평호 이사·김도근 차장) 등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베트남 측에서는 그린빌딩 등 건설투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제4위 해외투자대상국가로서,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및 상업시설 건설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으며 도로, 철도, 공항 등 정부 주도의 개발프로젝트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 건설업계의 관심과 진출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베트남 측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베트남 시장의 상황과 진출가능성을 파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종별 고용창출효과 비교 분석” 발간



우리 연구원은 건설부문 고용현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하고, 건설업의 고용창출 및 임금개선 효과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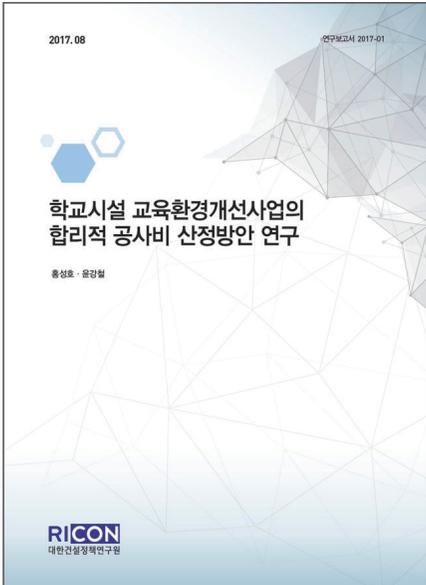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고용탄력성의 계수값은 설명변수로 건설투자액을 활용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부가가치, 건설기성의 순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건설투자가 증가할 경우 고용창출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건설업종별 고용탄력성은 전문건설업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건설투자액이 1% 증가했을 때 전문건설업은 1.121%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건설업 0.028%,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 0.884%에 비해 높게 도출되었다.

- 또한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전문건설업만이 고용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문건설업이 실질적인 건설시공의 주체라는 점에서 예상과 부합하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 건설투자 및 부가가치 증가에 따른 임금개선 효과 역시 전문건설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설기성은 종합건설업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근로자 세부 직종별 임금개선 효과는 기술직 근로자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사무직 근로자, 기능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건설투자, 기성, 부가가치의 증가가 고용창출과 임금개선 부문에 있어 하도급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큰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설업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의 발주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건설업의 역할이 반드시 요구된다. 건설업은 전체 고용의 7% 이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이며, 건설투자 확대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역시 크기 때문이다.

동 보고서를 통해 건설산업 내에서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의 고용창출 능력과 근로조건 개선 효과를 비교 할 수 있어, 건설업 고용부문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합리적 공사비 산정방안 연구” 발간



우리 연구원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공사비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방안을 제안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8건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례조사를 통해 설계가격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모든 사례의 당초 설계가격이 적산 전문가가 현장 여건과 공사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한 설계가격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가격 차이는 당초 설계가격 대비 평균 12.1%(건축공사 15.2%, 토목공사 8.2%)로서, 교육청의 공사비 깎기로 인한 중소 시공업체의 공사비 부족 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공사비 부족을 초래하는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최대한 많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예산이 분산 편성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단위사업 예산의 과소계상, 중복투자, 수선주기 조기 도래가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시설 장수명화를 위해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의 선택과 집중과 더불어 학교시설 특성을 반영한 수선주기 기준 마련 및 노후화·생애주기비용 정보의 DB화가 요구된다.
- 예산편성 기준단가 산정의 기초자료는 계약단가일 뿐만 아니라, 산정 기준 및 절차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설계단가를 기초로 예산편성 기준단가를 산정해야 하며, 기준단가 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소규모 공사가 대부분인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설계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도급 업체의 시공가격인 조달청 시장시공가격의 활용을 배제하고, 표준품셈 소규모 품 활용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설계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 학교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과 교육청 기술직의 업무가중으로 인해 공무원가 검토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공사비 검토 프로세스 합리화를 위해 민·관 공동 원가분석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과 공사비 이의신청 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본 보고서는 시공업체의 적정공사비 부족을 초래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합리적인 예산확보 및 공사비 산정기준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사전 협의 없는 무단 인용, 도용, 재가공, 전재 및 복제, 배포 행위를 일절 금합니다.